

EU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 포커스 : EU 집행위원회, '26년도 유럽학기 봄 패키지 발표
- 단신
 - [철강] EU 철강 수입 대응조치 관련 조강국 증빙 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개시
 - [화학] ECHA, REACH·살생물제 위험성 평가 위한 'Chesar Platform' 출시(6.2)
 - [EUDR] 산림전용방지법(EUDR) 정보시스템 개편 동향
 - [ESPR] EU 디지털제품여권(DPP) 시행을 위한 첫 공통 기술표준 발간



주요 경제통상 일정

일정	내용
6.10(수)	'27년 EU 예산안 발표, EU-ETS 개정안 관련 집행위원회 논의
6.12(금)	EU 경제·재무 장관 이사회 개최
6.15(월)	EU 외무 장관 이사회 개최
6.15(월)~17(수)	G7 정상회의 개최(프랑스)
6.15(월)~18(목)	유럽의회 본회의 개최(AI 디지털 옴니버스 논의, 대미 관세 표결, 폐차 규정 표결 등)
6.18(목)~19(금)	EU 정상회의 개최
6.24(수)	조세 제도(Taxation)·에너지 제품 법제화(Energy product legislation)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7.1(수)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 및 방위 단일시장 통신문 발표, 유럽혁신법(European Innovation Act) 발표
7.15(수)	EU-ETS 개정안 발표
7.22(수)	에너지 패키지 발표(전기화 행동계획)



EU 집행위원회, '26년도 유럽학기 봄 패키지 발표

- ◎ EU 집행위원회는 6.3일 회원국별 경제·재정·고용·사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6년도 유럽학기 봄 패키지(European Semester Spring Package)」를 발표
- ◎ 이번 봄 패키지는 '26년도 가을 패키지 발표('25.11.25일)로 개시된 '26년 유럽 정책 주기의 후속 절차로, 회원국별 국가보고서를 통해 국가별 권고(CSRs)를 제안
- ◎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 경쟁력 강화, 전략적 자율성 확보,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 고용·숙련 및 사회결속 강화를 위한 개혁·투자 이행을 권고

□ 개요

- EU 집행위원회는 6.3일 회원국별 경제·재정·고용·사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6년도 유럽학기 봄 패키지(European Semester Spring Package)」를 발표
 - 유럽학기는 EU가 회원국의 재정·경제·고용·사회정책을 조율하는 연례 정책 조정 체계로, 통상 가을 패키지를 통해 새 정책 주기를 개시하고 봄 패키지에서 국가별 권고와 재정·거시경제 평가를 제시
- 이번 봄 패키지는 '26년도 가을 패키지('25.11.25일 발표)로 개시된 '26년 유럽 정책 주기의 후속 절차로, 회원국별 국가보고서를 통해 구조개혁, 재정, 고용, 사회정책 과제에 대한 권고(CSRs, Country-Specific Recommendations)를 제안
 - 이와 함께 회원국별 △재정 준칙 준수 여부, △과도적자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 △거시경제 불균형 여부, △고용·사회 분야 과제를 함께 평가
 - * EU 회원국의 재정적자(GDP 대비 3%) 또는 국가채무(GDP 대비 60%)가 EU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집행위원회·이사회가 조정 권고를 제시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재정 감시 절차
- 이번 패키지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성, 안보 리스크, 생활비 부담 등을 배경으로 회원국별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
 -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 △경쟁력 강화, △전략적 자율성 확보,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 △고용·숙련 및 사회결속 강화를 위한 개혁·투자 이행을 권고
 - 동 권고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제는 아니지만, 향후 회원국별 산업·에너지·인프라 정책 변화를 가늠하는 참고 지표로 활용 가능

□ 주요 내용

- **(경쟁력)** EU는 회원국별 개혁·투자 권고안을 'EU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25.1.29일 발표)'과 연계해 단일시장 장벽 완화, 혁신 투자 확대, 기업 환경 개선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
 - EU 집행위원회는 단일시장 분절과 낮은 생산성, 혁신 활동 부진, 높은 에너지 비용, 전략 분야의 높은 대외 의존도 등을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평가

- 특히 EU의 '24년 R&D 지출은 GDP 대비 2.2%로 **한국(5.0%)**, 미국·일본(각 3.4%), 중국 (2.6%)보다 낮아, 혁신 격차 해소가 주요 과제로 부각됨
- EU 집행위원회는 장기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 저축을 생산적 투자로 연결하는 저축·투자 연합 구축을 강조
- **(에너지·방위)** EU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과 안보 리스크에 대응해 청정 에너지 전환과 방위 준비 태세 강화를 병행하는 방향을 제시
 - EU 집행위원회는 화석연료 수입 의존을 줄이고, 역내 청정에너지·전력망·저장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경쟁력과 안보를 함께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평가
 - 회원국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전력망 확충, 에너지 저장, 산업·건물·교통 부문 전기화, 취약계층 보호·에너지 안보 목적에 한정되지 않은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등을 권고
 - 방위 분야에서는 국방 생산 역량 확충, 공동조달 확대, 사이버·우주 자산 투자,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와 인접한 EU 외부 동부 국경 지역의 안보·민간 대비 태세 강화를 강조
- **(재정운용)** EU는 개편된 안정 및 성장협약*에 따라 순지출(Net expenditure) 증가율을 기준으로 회원국 재정 준칙 준수 여부를 평가하되, 국방·에너지 회복력 투자에는 한시적 유연성을 부여할 방침
 - * EU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감시하고, 정책 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EU 재정 준칙 체계
 -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25~'26년 순지출 증가율이 이사회 권고 경로를 준수하는지 평가하고, 중기 재정·구조계획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
 - 회원국 요청 시 '26.2월 이후 시행한 에너지 회복력 조치(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감축, 전력망·저장시설 투자, 청정에너지 확대, 에너지 절약 등)를 현재 국가별 예외 조항 (NEC, National Escape Clause)*의 적용 범위에 한시 포함 가능
 - * 예외적 상황에서 권고된 순지출 경로의 일시 이탈을 허용하는 조항으로, 현재는 유럽 재무장 플랜 (ReARM Europe Plan)에 따라 국방 지출에만 발동됨('28년까지 GDP 대비 최대 1.5%)
 - 다만 에너지 회복력 지출 한도는 기존 GDP 대비 1.5% 범주 내에서 '26~'28년 연 0.3%, 누적 0.6%로 제한되며, 재정 지속가능성 심사는 계속 적용됨
- **(기타)** 이외에도 EU는 '26년 고용 지침을 전면 개편하고, 최초로 전 회원국 보고서에 주거 시장 분석을 포함해 사회 적정가격 주택 공급 확대 등을 권고

□ 시사점 및 전망

- 이번 봄 패키지는 '26년 말 회복 및 복원력기금(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종료를 앞두고, 유럽학기가 EU 개혁·투자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회원국별 이행을 점검하는 기준틀로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줌
- * 코로나19 이후 EU 회원국의 경제 회복과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EU 재정지원 제도
- EU 집행위원회는 RRF가 종료되더라도 회원국이 이를 통해 추진한 개혁·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
- EU 집행위원회의 '28~34년도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FF)에 따르면, EU 자금 수령을 위한 회원국별 국가·지역 파트너십 계획(NRPP)은 유럽학기에서 제시된 회원국별 권고 사항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을 다뤄야 함

- 유럽학기는 단순한 재정 감시 절차를 넘어 산업·에너지·노동·사회·지역 정책을 함께 조율하는 EU의 종합 정책 관리 수단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회원국별 보고서 내용이 관련 분야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 자료 : EU 집행위원회(6.3, Q&A) 등/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황준혁(jh10535@kotra.or.kr)



□ [철강] EU 철강 수입 대응조치 관련 조강국 증빙 기준 마련 위한 의견수렴 개시

- 6.4일, 집행위원회는 오는 7.1일부로 시행 예정인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대응조치」 관련 '조강국(Melt and Pour)*' 증빙 서류 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을 개시함
 - * 철강이 최초로 용해되어 초기 고체 형태로 주조된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산지 우회 방지 차원에서 도입

(참고) 동 조치는 6월 말 만료되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규정*으로, 연간 무관세 수입쿼터(TRQ) 1,834만 톤 설정 및 초과 물량에 50% 관세부과. 현재 입법 마무리 단계로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태

* Regulation addressing the negative trade-related effects of global overcapacity on the Union steel market

- 의견수렴 주요 내용
 - (대상) 철강 생산자, 수입·무역기업, 수요기업, 업계협회, 회원국·제3국 정부, 세관 당국 등
 - (목적) 수입 철강 제품의 조강국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유형 파악
 - (수렴 기간) '26.6.4~7.2일(링크)
 - (방식) 의견수렴 전담 포털(Have Your Say)이 아닌 교역·경제안보총국(DG Trade and Economic Security) 홈페이지를 통한 표적 의견수렴(targeted consultation) 진행
- EU는 제3국 단순 가공을 통한 원산지 변경의 우회 수출 행위를 방지하고, 공급망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강국 증빙 제도를 도입, 수입자의 입증 서류 제출 의무 부여
- 집행위원회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인정이 가능한 증빙 서류 범위를 확정하고, '26.8.31일까지 이행법(Implementing Regulation)을 채택할 예정
 - 수입자의 조강국 증빙 서류 제출 의무는 '26.10.1일부터 적용
- 조강국 데이터는 추후 역외국별 쿼터 배분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의견수렴은 조강국 기반 수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단계로 볼 수 있음
 - * 집행위원회는 '28.6.30일까지 조강국을 국별 쿼터 배분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평가하고, 필요시 관련 입법을 제안할 예정

• 자료 : EU 집행위원회(6.4)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doyeonkim@kotra.or.kr)

□ [화학] ECHA, REACH·살생물제 위험성 평가 위한 'Chesar Platform' 출시(6.2)

- 6.2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한(REACH) 및 살생물제관리 규정(BPR*) 관련 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보고에 대해 통합 지원이 가능한 신규 플랫폼 'Chesar Platform'을 출시
 - * Biocidal Products Regulation(EU 528/2012). 살생물제는 세균·해충·곰팡이 등 유해 생물로부터 인체·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제품(소독제·방부제 등)을 지칭

- 기존에는 △REACH용 안전성보고서(CSR) 작성 도구(Chesar), △살생물제용 산정 도구, △ 환경위험성 평가 도구(EUSES2.2.0)를 각각 별도 사용해야 했으나, 이를 단일 환경에서 통합 -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노출량 산정 모델 내장, 자동 계산,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 등을 제공

<화학물질관리제도별 지원 기능>

구분	내용
REACH	안전성평가(CSA) 및 안전성보고서(CSR) 작성, 안전보건자료(SDS)용 노출 시나리오 작성 기능 지원 * CSA(Chemical Safety Assessment), CSR(Chemical Safety Report), SDS(Safety Data Sheet)
살생물제관리규정	개별 활성물질의 환경 노출·위험 평가 보고서(RAR, Risk Assessment Report), 관할 당국 보고서 작성 지원

- 동 플랫폼은 유럽화학물질청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며, 기존 Chesar 3은 사용자의 플랫폼 적응 및 평가자료 이전을 위해 약 1년간 병행 운영될 예정

• 자료 : ECHA(6.2)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doyeonkim@kotra.or.kr)

□ [EUDR] 산림전용방지법(EUDR) 정보시스템 개편 동향

- EU 집행위원회, 최신 V3 버전 EUDR 정보시스템 API* 레퍼런스 공식 배포(6.1)
 - 집행위원회는 5.4일 제안된 EUDR 간소화 패키지에 맞춰, 기업들이 디지털 형식의 실사 선언서 제출·검증 플랫폼인 EUDR 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단계적으로 진행 중(참고)
 - 현재 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해 접근이 제한 중인 정보시스템은 6월 중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며, 집행위원회는 이에 앞서 역내·외 적용기업, 위임 대리인, IT 서비스 업체의 실무자 시스템 연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V3)을 선제적으로 발표
- 핵심 업데이트 기능
 - (간소화 패키지 반영) 이번 간소화 과정에서 신설된 소규모 1차 사업자(MSPO)를 위한 간소화된 신고서(SD) 도입 및 그룹화 기능 반영

(참고) MSPO와 간소화된 선언서(SD, Simplified Declaration)

MSPO는 저위험국에 소재하여 원자재·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영세·소규모 사업자로 일반 실사선언서(DDS, Due Diligence Statement) 대신 간소화된 선언서를 1회 제출 시 제품 정보 변경 전까지 유효성이 무기한 인정됨. 또한 MSPO는 제품 원산지를 상세 지리 좌표 대신 우편 주소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시스템 안정성 확보) 대량 전송으로 인한 인프라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개 DDS당 선언 가능한 최대 품목 수를 100개로 제한 및 API 호출당 트래픽 제한 적용
- (원산지 지리 위치 입력 규칙 명시) 지리적 좌표는 소수점 6자리까지 저장되며, 4 헥타르 이하 토지는 점으로, 4헥타르 초과 시 다각형으로 구역을 설정하여 제출
- (하위 공급망 기업 지원) 하위 공급망 기업이 상위 공급망 기업이 제출한 실사 선언서의 유효성을 참조·검증 번호를 통해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연동 시스템 구축

• 자료 : EUDR 정보시스템 API 레퍼런스(V3) /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윤윙희(unoin@kotra.or.kr)

□ [ESPR] EU 디지털제품여권(DPP) 시행을 위한 첫 공통 기술표준 발간

- 유럽표준화위원회(CEN)·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는 EU 디지털제품여권(DPP)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첫 공통 기술표준*을 발간
 - * DPP 운영에 필요한 IT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시스템 설계 및 연동 방식을 정한 공통 기준
- 이번 표준은 제품별로 DPP에 표시·제공해야 할 구체 정보 항목이 아닌, DPP 시스템 구현을 위한 공통 운영 기반을 다룸
- 데이터 식별·연결·저장·조회 등을 위한 6개 표준이 우선 발간됐으며, 접근권한·보안 및 데이터 신뢰성 관련 2개 표준은 승인 절차 진행 중
- 제품별 DPP 필수 입력 정보와 적용 시점은 향후 에코디자인규정(ESPR) 위임법령 또는 품목별 규정에서 구체화될 전망

<EU 디지털제품여권(DPP) 기술표준 6종 구분 및 주요 내용>

구분	표준명	주요 의미
EN 18216:2026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DPP 데이터를 시스템 간 주고받는 방식과 통신 규칙
EN 18219:2026	고유식별자	제품, 사업자, 시설, DPP 등을 구분하는 식별 체계 기준
EN 18220:2026	데이터 캐리어	QR, 바코드, NFC 등 제품과 DPP를 연결하는 수단의 기준
EN 18221:2026	데이터 저장·보존·지속성	DPP 데이터를 저장, 보관, 장기 유지하는 방식의 기준
EN 18222:2026	API	DPP 생성, 조회, 갱신, 검색 등을 위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기준
EN 18223:2026	시스템 상호운용성	서로 다른 DPP 시스템이 호환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자료 : 유럽표준화위원회(CEN)·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 자료 토대로 KOTRA 브뤼셀무역관 정리

- DPP 시스템 공통 기술 기반이 본격 구체화됨에 따라 업계는 DPP 도입 준비 상황과 관련 기술표준 대응체계 점검 중요성 확대
 - EU 수출 제조사·브랜드사, DPP 플랫폼사, ERP·PLM 업체 및 인증·시험기관 등은 해당 표준을 검토하고, 데이터 관리 체계·시스템 구축 방식·적합성 평가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업계는 DPP를 단순 제품정보 공개나 QR 라벨링이 아닌 공급망·IT·라벨링 전반의 제품 데이터 관리 체계를 재설계하는 규제 대응 인프라로 인식하여야 함

• 자료 : CEN/CENELEC(5.27), CDX(5.29)/ 작성자 : 브뤼셀무역관 심은정(inji.sim@kotra.or.kr)



EU 무역구제조치 동향

* 발표일 클릭 시 EU 관보로 연결됩니다.

산업	품목	CN 코드	유형	조치	대상국	발표일
화학	아디핀산 (Adipic acid)	29171200	반덤핑	관세부과	중국	'26.5.5
화학	알킬포스폰산 (Certain alkyl phosphonic acids and their sodium salts)	2931498060, 2931499090	반덤핑	잠정관세	중국	'26.5.13
기타	PET 스펀본드 (PET Spunbond)	5603139070, 56031420, 5603148070	반덤핑	잠정관세	중국	'26.5.13
철강	용접 철망 (Welded steel mesh)	731439, 731431, 73142090	반덤핑	조사개시	중국	'26.6.3
화학	지방족-방향족 코폴리에스테르 (Aliphatic-aromatic copolyesters (certain))	3907998050	반덤핑	조사개시	중국	'26.6.4



EU 분야별 의견수렴

분야	내용	수렴 기간	링크
순환경제	산림전용방지법(EUDR) 부속서 1 수정·간소화를 위한 의견 수렴	5.4~6.16	링크
운송	대체 연료 인프라 규정(AFIR) 개정 검토 관련 증거 수집	5.11~8.3	링크
환경	CBAM 제3국 기지불 탄소 비용 공제 시행령 초안 의견 수렴	5.13~6.10	링크
기술	생명공학법II(Biotech Act II) 마련 위한 증거 수집	5.13~6.10	링크
공급망	핵심원자재법(CRM) 내 원자재센터 구축 위한 증거 수집	5.19~8.11	링크
순환경제	철강 제품 대상 에코디자인규정(ESPR) 위임법 제정위한 증거 수집	5.20~8.12	링크
보건	담배 규칙 개정 위한 증거 수집 및 의견 수렴	5.18~8.14	링크
자동차	Euro 7 전동화 차량 성능·브레이크 분진 규제 관련 시행령 초안 의견 수렴 ①전동화 차량 성능 형식승인 개정법, ②브레이크 분진 형식승인 시행령	5.27~6.24	개정법, 시행령



브뤼셀무역관 발간자료

(과거 보고서: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글로벌이슈모니터링	EU 집행위원회, 「기술주권 패키지」 발표	2026. 6월
경통리포트26-9	유럽의회, 글로벌 철강 과잉 생산 대응 조치안 최종 승인(5.19)	2026. 6월
경통리포트26-8	EU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6. 5월
경통리포트26-7	EU 주요 통상협정 현황 및 추진 동향	2026. 5월
경통리포트26-6	EU 에너지·원자재 공동구매 플랫폼 운영 현황	2026. 5월
경통리포트26-5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지침문서 및 FAQ 주요 내용	2026. 4월
경통리포트26-4	EU 단일 기업법 체계(EU Inc.) 초안 주요 내용	2026. 4월